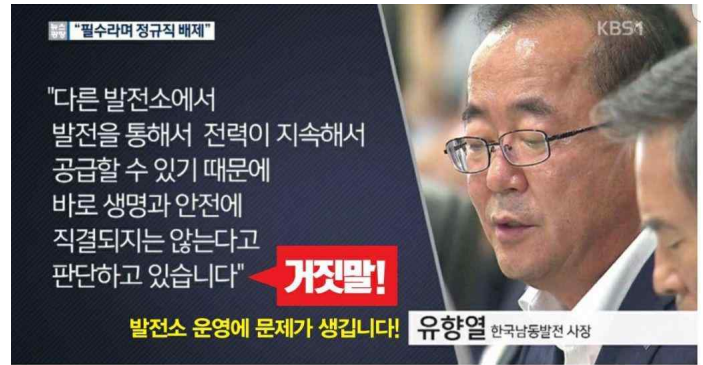


정부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주장, 발전5사는 아니라고 조장!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 이 문구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동안 79곳의 노동위원회 및 법원은 ‘전기는 국민의 일상생활, 산업, 경제 및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발전소의 운전·정비는 필수유지업무로 평상시의 100% 유지해야 한다.’는 발전5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했다. 이 결정 안에는 현재 외주화 된 대부분의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즉, 발전소 운전·정비는 정부의 주장처럼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는 얘기다. 그런데 발전5사 경영진들은 온갖 궤변으로 아니라고 조장한다.



정부(일자리위원회)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 위원회(기획단)가 한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필요한 생명·안전 업무의 범위에 대한 연구』 최종보고서(현재까지 비공개)에도 ‘공중의 생명·안전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다. 이 보고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법률적 근거와 다양한 기준 및 설정, 도급으로 인한 폐해제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첨부 표는 수많은 생명·안전업무를 5가지의 원칙과 추가적 고려사항 등을 객관적이고 함축적인 평가의견을 담았다. 이 표를 냉철히 확인하고

사례 직종별 평가기준 영역 점수와 우선순위 총점

순위	직종	① 형평성	② 인구크기	③ 시간인급성	④ 심각성	⑤ 인프라침식	총점 (700점 만점)
1	[재난관리] 재난관리와 긴급구조 업무	96.42	135.63	143.94	157.65	103.71	637.35
2	[원자력 및 발전]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설비의 운전 업무	68.87	133.51	135.60	159.93	107.28	605.20
3	[공중보건] 인간, 동식물과 관련된 방역, 감염 관리업무	80.93	133.51	137.68	150.79	98.34	601.26
4	[공중시설] 공중 이용시설, 교통시설 안전업무	91.26	127.15	127.25	148.51	103.71	597.88
5	[원자력 및 발전] 원자력 설비의 관제, 운영, 정비 및 안전과 보안업무	70.60	127.15	133.51	155.36	100.13	586.75
6	[의료]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등의 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업무	75.76	103.84	139.77	150.79	105.50	575.66
7	[운수] 철도 차량, 선로, 통신 및 신호설비의 유지, 관리, 보수, 정비업무	82.65	118.68	123.08	139.37	100.13	563.91
8	[공중보건] 정수, 수도 시설 운영과 관리업무	72.32	139.87	106.39	132.52	101.92	553.01
9	[운수] 여객차 운전 업무	80.93	112.32	118.91	139.37	91.19	542.72
10	[운수] 선박안전과 관련된 업무 (항해, 운항, 통신, 기관, 승무, 안전관리 등)	74.04	108.08	123.08	143.94	89.40	538.54
11	[의료] 혈액 체제의 제조, 관리, 수송업무	75.76	108.08	112.65	137.09	96.56	530.13
12	[원자력 및 발전] 발전 설비 관제, 운영, 정비 및 안전과 보안업무	72.32	118.68	112.65	137.09	89.40	530.13
13	[항공] 항공기 조정 업무	49.93	99.60	135.60	153.08	89.40	527.62
14	[항공] 항공기와 항공시설, 관련설비의 운영, 유지, 정비, 보수업무	53.38	97.48	127.25	155.36	91.19	524.67
15	[항공] 관제업무	53.38	91.13	133.51	146.23	92.98	517.22
16	[가스 및 석유] 인수, 제조 저장, 공급업무와 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67.15	108.08	110.56	132.52	89.40	507.72
17	[정보] 개인정보 취급과 보호업무	74.04	125.03	93.87	118.81	89.40	501.16
18	[통신] 통신망 관리와 운영, 수리업무	61.99	122.91	106.39	118.81	87.62	497.72
19	[항공] 탑승수속, 보안관련 업무	58.54	84.77	102.22	130.23	85.83	461.59
20	[운수] 도로유지와 관리업무	58.54	95.36	87.62	114.24	78.68	434.44

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앞서 얘기한 사측 주장이 일리가 있는가? 아니면 발전노조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가?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로 죽거나 다쳐야 했다. 불합리한 차별은 없애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이 답이라고 외쳐야 한다.**

서부노조의 황당한 주장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풀어보자

첫째, 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미 민간기업의 정규직이기에 비정규직이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의 안정성**이다. 서부노조가 이미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한전산업개발은 발전사와 **3년마다 용역계약**을 한다. 이에 따라 한전산업개발 노동자들은 **3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는 발전소 직원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입찰 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의 옷으로 갈아입거나, 그게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기 충분한 조건이다. 우측 사진은 서부노조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도플갱어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실화다.



둘째, 기존 발전사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가 축소할 것이다? 가짜뉴스다.

총인건비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인한 기존의 **용역비가 인건비로 전환**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시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늘어나 정원만큼 추가 출연이 가능하고 적립금도 늘어난다. 다시 말해 **1인당 인건비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줄어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이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셋째, 발전사 정규직 입사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 또한 가짜뉴스다.

현재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설비정비 업무는 용역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즉 **발전사 정규직 입사지원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으로 발전사 정규직 입사지원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가뜩이나 취업난에 마음 고생하는 입사지원자들을 부추겨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꿈수다. 또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오히려 미래의 발전사 입사지원자들에 대한 **기회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정규직화 시 용역업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직접고용은 용역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정규직 전환결정 지연으로 용역계약은 3개월~6개월 연장되다가 정규직 전환결정이 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서부노조는 **차라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시라~

한전시절, 모두 한 식구였다. 그러나 외주화는 발전소 민영화를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발전현장의 직접고용, 발전노동자들 스스로 민영화와 외주화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임에는 틀림없다.